

서 평

Pauly, Louis W. and Simon Reich

1997 "National Structure and Multinational Corporate Behavior: Enduring Differenc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1, Winter.

Pitelis, Christos

1991 "Beyond the Nation-State?: The Transnational Firm and the Nation-State," *Capital & Class*, 43, Spring.

Rodman, Kenneth A.

1995 "Sanctions at Bay? Hegemonic Declin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ince the Pipeline Ca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1, Winter.

Tarzi, Shad M.

1995 "Third World Governmen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Dynamics of Host's Bargaining Power," in Jeffery A. Frieden and David A. Lake (ed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on Global Power and Wealt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년대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송주명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I. 선진 투자본국에서 정부와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비대칭적 정치효과

다국적기업이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행위자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1년에 버논(Raymond Vernon)이 『궁지에 몰린 주권(Sovereignty at Bay)』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부터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ernon, 1971). 이후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많은 이론가들, 특히 기업의 미시적인 해외투자 동인을 연구해 온 이론가들에 의해 다국적기업은 국민국가단위로 분립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자이자, 전통적 국민국가의 주권영역을 빠른 속도로 침식해 가는 존재로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세계무대에서 전개되는 초국적 상호의존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에 입각해 있는 만큼 설득력이 있었으며,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경제이론에서 주류적 위치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 또한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해외투자현상을 국민국가(특히 미국)의 거시적 대외정책, 국가와 기업간의 미시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미국 신중상주의학파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Gilpin, 1970, 1975, 1987; Krasner, 1973, 1978;

Sylvan, 1983). 이들 연구는 자유주의학파의 연구가 주로 기업동기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구조 혹은 조건—특히 본국에서—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 요컨대 주류이론이 기업활동의 세계화로부터 출발하여 국민국가 일반의 정책능력 약화를 주장한 반면, 신중상주의학파는 투자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다국적화가 본국정부의 정책능력을 확장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논쟁은 언제나 대국을 이루면서 전개되지만,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합리적 핵심이 존재한다. 신중상주의학파의 분석은 다국적기업이 국민국가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침식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면에서 본국과 투자대상국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¹⁾ 특히 투자본국이 선진국일 경우,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의 개시로 전통적인 정책능력은 제약되지만 자국계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영역이 부단히 개척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초국적 활동이 선진 투자본국과 발전도상 투자대상국의 정책능력에 현저히 비대칭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 1990년대 선진 투자본국에서 다국적기업과 정부정책: 논문들의 요약

초국적 자유무역기구인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1990년대는 본격화된 세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도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여전히 불균등하게 국민국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冒頭에 열거한 네 개의 논문들은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것들로서, 선진 투자본국에서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혹은 그 정부)의 관계를 다루거나,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주제로 하면서도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간의 주권의 비대칭적 침식현상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다. 우선 이들 논문들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도록 한다.

폴리(Pauly)와 라이쉬(Reich)의 논문은 1990년대의 시점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적성(nationality)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실증해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하다. 주류이론 및 급진주의이론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해 오던 다국적기업 행위의 “수렴가설”과는 달리, 현실의 다국적 기업행태는 그 본국의 국민국가적 구조(national structure)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Pauly and Reich, 1997: 1-8). 다국적기업의 행위패턴은 내부 거버넌스(governance), 장기적 자금조달구조, R&D에 대한 접근, R&D시설의 입지, 해외투자와 기업내 무역전략 등의 면에서 출신국가별로 분명히 구별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본국의 국민국가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전통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Pauly et al.: 8-26).

피텔리스(Pitelis)는 다국적기업의 이익과 국가이익이 상호배제적인 것만은 아님을 다수의 이론적 저작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본국정부의 관계

1) 이에 대해서는 Hymer 등 맑스주의계열의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Pitelis, 1991: 145).

는 자유주의적 주류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경쟁 혹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간의 이익일치라는 큰 틀 속에 경쟁이 내포되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과 본국정부의 관계는 “협력(collusion)과 경쟁(rivalry)”의 관계로서 특징 지워 진다 (Pitelis, 1991: 132-135, 142-147). 나아가 피텔리스의 논문은 다국적기업-정부관계론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고 있는데, 국가이익에 대한 맑스주의적 설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흥미를 끈다.

로드만(Rodman)의 논문은 미국정부와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텔리스의 명제를 실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논문은 기업의 해외투자와 더불어 본국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국제화되는지, 나아가서 그러한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헤게모니 쇠퇴(hegemonic decline)” 모델에 입각하여, 1970년대이래 미국정부의 미국계 다국적기업 및 투자대상국에 대한 개입정책은 1950-60년대와 비교하여 失效傾向을 보이고 있음을 인정한다 (Rodman, 1995: 105-111). 그러나 동시에 헤게모니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이래 미국정부는 다국적기업 행위를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걸맞게 변화시킬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미국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중상주의적 개입정책은 퇴조경향을 보이지만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Rodman, 1995: 132-137).

타아지(Tarzi)의 논문은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계기로 심화되는 본국과 대상국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때 대상국은 국내정치상의 제약, 국제적 제약요인, 나아가서는 본국정부의 정책에 의해 정책주권이 크게 제약된다 (Tarzi, 1995: 154-164). 이것은 발전도상국의 개발문제를 논의할 때에 현지정부와 다국적기업의 교섭관계를 추상적으로 이해하여 ‘양자간의 평등한 협상관계’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됨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다국적기업을 매개로 한 본국과 대상국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라기보다 일종의 비대칭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큰 이유중 하나가 선진 투자본국의 정책전개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선진 투자본국에서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관계가 본국, 다국적기업, 대상국이라는 삼자간의 국제적 비대칭구조로 전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III. 논문들의 주요논점에 대한 검토

앞의 논문들은 다국적기업의 국적성, 다국적기업정책과 관련된 국가이익 정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본국정부의 국제적 정책의 전개, 그 최종적 결과로서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간의 비대칭적 경제연계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주류이론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논점들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1. 다국적기업의 국적성

이 문제는 이미 1970년대 초에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가 다국적기업의 단계적 진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적한 적이 있다 (Kindleberger, 1970: 193-195). 그러나 그의 논의는 초국적 수렴을 전제로 하여 기업국적성을 과도적인 잔존범주 정도로만 인정하는 것이었다. 주류이론의 이러한 시각과는 달리, 폴리와 라이쉬는 1990년대 현재의 시점에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상호 구별되는 활동패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패턴의 차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일본·독일 삼국의 정치 및 경제제도상의 차이, 그리고 주요한 경제활동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에 의해 크게 조건 지워진다. 즉 국내적 구조는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차이라는 형태로 다국적기업의 행위패턴에 각인(embedded)되고 있는 것이다 (Pauly et al., 1997: 7, 23; Sally, 1995: 15-26).

한편 이러한 각인된 국적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내의 기업국적성문제를 둘러싼 경제정책 논쟁—로버트 라이쉬와 로라 타이슨의 “누가 우리인가?(Who is Us?)” 논쟁—에서도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이 논쟁과 동일한 맥락에서 실천적인 한 연구는 최근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세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수 미국기업과 그 태반인 미국경제가 쉽게 단절될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가령 미국계 다국적기업은 고용, R&D, 생산시설입지, 경제활동 비중면에서 아직도 미국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urton et als., 1994: 33-34). 이 설명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면, ‘초국적기업’ 일반과 같은 추상적인 이미지보다는 특정 선진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상당기간동안 지속하는 ‘국적 있는 다국적기업’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보다 의미 있게 될 것이다.

2. 기업이익과 국가이익

기업이익과 국가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길핀(Robert Gilpin), 크래스너(Stephen Krasner) 등 미국 신중상주의 학파의 꾸준한 논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적 경제토양, 나아가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적 상황에서 국가가 설정하는 이익—주로 대외 정책 혹은 대외경제정책 목표—이 어떻게 관철되는지(Krasner, 1973; 1978) 혹은 객관적 국가이익과 기업편익이 어떻게 괴리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해왔다 (Gilpin, 1975; 1987). 이 연구들은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과 정부의 국민경제적 목표설정이 어떠한 조건에서 일치, 혹은 불일치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다국적기업 활동을 본국정부가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이(Joseph S. Nye, Jr.)와 코헤인(Robert Keohane) 등 신자유주의학파도 익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국가이익이 정의되는 국내적, 국제적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Nye, 1988: 241-246).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미국 신중상주의학파는 몇 가지 제도적인 설명을 시도—가령 크래

스너의 국가와 중앙정책결정자의 동일시 등—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대응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Sylvan, 1981: 381-387).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텔리스의 논문은 하나의 새로운 모색으로서 의미가 깊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는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단순한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이익일치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는 경쟁관계, 즉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국가와 다국적기업간의 이익의 상호침투 관계는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보증기관 형성과정에서도 빈번히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²⁾ 즉 일정한 시점, 일정한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정책은 국제파적 기업의 이익과 크게 변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텔리스는 국가이익 범주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그의 문제제기는 보다 근본적이다. 가령 맑스주의 국가론 논쟁과 관련하여 정당화 문제 등 자본일반의 이익과 개별적 자본분파의 이익의 이익을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본일반의 이익이란 국민국가체계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방향에 입각해 있고 세계급적 요구의 일정한 균형 위에서 성립한다. 이 자본일반의 이익이 국가이익과 등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Pitelis, 1991: 136-147). 이는 신중상주의학파의 일면적 국가 이익관에 대해 보다 일관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주의 논쟁의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가이익에 대한 再定義 시도는 아직 부족하다. 즉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자본일반의 이익이 어떠한 국내외적 조건하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는가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3. 다국적기업에 대한 본국정부의 국제적 정책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활동에 따라 국제관계, 혹은 국가간 외교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다국적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국제관계에 뛰어들고 있으며, 다국적기업활동에 대한 본국 및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스트레인지(Susan Strange) 등은 이른바 “삼변외교(triangular diplomacy)”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 그녀의 관심은 다국적기업활동의 활발화에 따라 전통적 외교관계가 어떻게 취약화되며 새로운 “외교”축이 어떻게 창출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Strange, 1995: 62-68; Stopford and Strange, 1991). 그러나 그녀의 분석에는 198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 활동을 둘러싼 선진 본국정부의 새로운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삼변외교”의 개념 속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의 비대칭적 발전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부족하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주류적 문제의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2) 이에 대해서는 Lipson(1978: 351-374)을 참조. 립슨은 미국의 해외투자보증기관의 발생·발전과정에서 기업선호가설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지만, 기업선호와 국가주도 간의 동시 평행적 관계의 전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로드만은 다국적기업과 선진 본국정부의 관계, 나아가서는 선진 본국정부의 초국경적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자이다. 그는 논문에서 ‘미국정치체계가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네트워크로 하여금 경제제재(經濟制裁)를 지지하도록 하는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상실해 왔는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후 1970년대까지 미국은 ‘구조적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통해 자신의 정책목표에 대해 기업순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경제력 상대적 약화 및 동서간 데탕트, 베트남전쟁의 상흔으로 헤게모니 기반이 심각히 부식되면서 경제제재에 다국적기업을 동원하는데 따르는 능력 또한 현저히 축소되었다. 1970년대의 이 경향은 다국적기업을 이른바 ‘사적인 정부(private government)’와 같은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에다 다국적기업들은 국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공적전략과의 교차목적(cross-purpose)을 형성해 가는 방법으로 세계적 목표를 추구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dman, 1995: 107-111).

그러나 로드만의 결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즉 이와 같은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이래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행동은 미국정부의 외교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정부는 내외의 위협성³⁾에 대한 기업인식을 증폭시킴으로써 대상국정부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다국적기업은 본국의 외교정책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행위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국정부 또한 자신의 정책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坐視하고 있지만은 않다. 즉 정부는 기업이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목표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odman, 1995: 132-137). 로드만의 새로운 논점은 피델티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들이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국제무대 속에서 본국정부와 다국적기업의 관계 또한 일방적인 주권침식의 관계라기 보다는, 갈등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공유하는 ‘평행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4. 다국적기업,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심화되는 비대칭관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능력의 제약성 문제는 일찍이 중속이론가들의 주요한 관심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동적 관계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Sunkel, 1993). 이것은 그들의 설명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 밖에도 투자대상국 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발론적 맥락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

3) 외적 위협성이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나 기타수단을 통해 기업비용을 증대시켜 기업정책결정을 유도 혹은 억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위협성이란 잠재적으로 이득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합법적이지만 기업활동이 본국의 정책목표나 여론감정에 어긋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Rodman, 1995: 133-136).

도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왔다. 그러나 주류이론이든 중상주의적 접근이든 이들 연구들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과 현지정부 간의 관계를 ‘쌍무적 독점(bilateral monopoly)’의 수평적 협상관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Moran, 1993: 4-5; Strange, 1995: 65). 그러나 통계 및 실증연구는 발전도상국의 경우 투자자와 현지정부의 관계가 심각히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UNCTC, 1991: 45-57).

타야지의 논문은 발전도상국의 정부가 관계를 변화시켜 갈 잠재적인 능력—정부의 전문성 정도,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정도, 해외투자 유형, 우선적 경제불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타야지는 투자대상국 내부의 제약요인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힘 및 국제적 요인으로부터의 제약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투자본국 정부에 의한 제약요인들이다. 앞서 보았지만, 선진 투자본국—여기에서는 특히 미국—은 대외정책, 혹은 대외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자국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다국적기업도 본국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 유리한 현지정부에 대한 외교정책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따라서 현지정부는 ‘본국정부의 잠재적 보복을 고려하면서 정책결정과정과 잠재적인 협상우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정책주권이 더욱 침식되어 간다 (Tarzi, 1995: 163-164).

IV. 맺음말

1980년대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신자유주의적 무드 속에서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재론한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와는 다소 거리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세계화의 부작용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간의 관계라는 해묵은 주제를 재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화의 가속적 진전과 세계경제의 전반적, 지역적 통합경향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 영역은 의연히 잔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고, 그 주권의 침식정도도 세계경제내의 위치에 따라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주권”이라는 관념은 한 시대동안의 일반적 담론이었다. 그러나 그 관념만으로는 오늘날 세계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야기되는 복잡성, 불균등성, 비대칭성의 문제를 적절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 살펴본 논문들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같은 주류적 인식들의 추상성을 정정하려는 노력일 수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들의 소재를 밝히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선진 투자본국에서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관계는 일방적인 “주권침식”의 관계가 아니고 평행한 “경쟁적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활동은 본국정부의 정책을 수반한다. 다국적기업과 본국정부 정책의 이와 같은 ‘평행적 국제화’는 투자대상국인 발전도

상국의 정책능력을 중층적으로 제약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국제관계를 더욱 비대칭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이 논문들은 몇 가지 한계를 동반하고 있다. 첫째, 피텔리스의 논문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선진 투자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의 동기, 즉 이익의 정의문제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본국의 정책개입의 효과성 및 그 원천, 혹은 구체적 정책전개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일반화가 필요하다. 로드만의 경우 기업결정의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상관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정책, 기업환경, 기업정책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들의 일관된 논점들을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존재함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가령 1980년대 아시아NIEs의 해외투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중간위치에 존재하는 국가에서 다국적기업과 본국정부의 관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urton, Jr., Daniel F., Erich Bloch, and Marks S. Mahaney. 1994. "Multinationals: The 'Who Is Us' Debate." *Challenge*. 37. September/October.
- Gilpin, Robert. 1970.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Robert Keohane and Joseph S. Nye, eds.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U.S. Power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 1970. *Power and Money: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 Krasner, Stephen. 1973. "Business Government Relations: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7: 4. (Winter).
- _____. 1978.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pson, Charles. 1978. "The Development of Expropriation Insurance: The Role of Corporate Preferences and State Initi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2. Spring.

- Moran, Theodore H. 1993. "Governmen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odore H. Moran, ed. *Governmen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Routledge.
- Nye, Jr., Joseph S. 1988.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XL: 2. January.
- Sally, Razeen. 1995. *State and Firms: Multinational Enterprise in Institutional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oford, John M., and Susan Strange. 1991. *Rival State, Rival Firms: Competition for World Market Sha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nge, Susan. 1995. "State, Firms and Diplomacy." in Jeffery A. Frieden and David Lake, ed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on Global Power and Wealth*. New York: St. Martin's Press.
- Sunkel, O. 1993. "Big Business and 'Dependencia': A Latin American View." in Theodore H. Moran, ed. *Govern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New York: Routledge.
- Sylvan, David J. 1981. "The Newest Mercanti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5: 2. Spring.
- UNCTC. 1991. *Government Polic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UN.
- Vernon, Raymond
_____. 1971. *Sovereignty at Bay*. New York: Basic Books.

